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함평을 찾아 유권자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가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후보들과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지역발전 내가 적임자"… 마지막까지 간절한 지지호소

통합시장 후보들, 도보·거리 유세…바닥 민심 다져
광산을 후보들도 지지 호소…정당, 투표 참여 독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광주·전남지역 후보자들이 주요 거점을 돌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은 통합특별시의 비전과 정치 구도 재편을,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론과 민주당 견제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구례와 담양, 함평 등 전남권을 순회하며 광주 말바우시장과 동구 푸른길 일대에서 도보 유세를 펼쳤다. 민 후보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전날부터 차량 유세를 중단, 민주당 원팀 걷기 유세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곡성 농민 인사와 광주 산단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광주 5개 구와 양동시장, KTX광주송정역, 첨단·상무·충장로 일대를 돌며 막판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광주·전남의 정치와 행정을 바꿀 수 있도록 득표율 30%를 올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진보당 이종욱 후보는 광산구와 북구를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펼쳤다.

특히 민주당 일당 체제를 넘어서는 '호남 정치 양날개' 구도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진보당 후보들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권에서 출발해 광주 서구와 광산구로 이동하며 노동자 생명과 안전, 민생정치를 강조했다. 강 후보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희생자 추모 메시지를 내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퇴근하는 평범한 일상이 왜 지켜지기 어려운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저한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무소속 김광만 후보는 하남산단, 호남대, 화순, 챔피언스필드, 전남대 후문 등을 돌며 민주당 후보 견제와 자신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호소했다.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도 막판 표심 잡기에 박차를 가했다.

임문영 후보는 임곡동 농촌지역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들으며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그는 당초 예정된 기자회견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희생자 애도 차원에서 취소,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AI 전략을 설계해온 경험과 역량을 전남광주와 광산의 미래를 위해 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는 신창·신가·수완동 등 광산구 주요 거점을 돌며 민주당 일당 독점의 폐해를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후보는 하남동과 수완동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변화론을 부각했으며, 진보당 전주연 후보는 민주당 일당 체제를 넘어서는 '호남 정치 양날개론'으로 유권자와 접점을 넓혔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수완 국민은행사거리 등에서 AI 산업혁신, 기본사회, 미래 교육 공약 등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했고, 무소속 구본기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내란 척결을 위한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각 정당도 마지막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호소문을 통해 "내일 투표 참여로 내란세력을 단죄하고 광주의 희망을 만들어 달라"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광주의 시계를 힘차게 돌리고,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낼 최고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전남 청년후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실행으로 평가받겠다"며 지역기업 성장, 청년 정책, 농산어촌 포용, 권력 견제 역할을 약속했다.

진보당 전남광주 후보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모두 투표장으로 나와 달라"며 "전남광주의 미래를 바꿀 강력한 대안인 진보당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초대 통합특별시교육감 후보들 막판 총력전

광주·전남 누비며 지지 호소
후보별 공약·메시지 부각

이정선 김대중 장관호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광주와 전남 곳곳을 돌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후보들은 종일 이어진 비에도 이른 아침부터 거리와 전통시장, 번화가 등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강숙영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남부시장과 무등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며 현장 유세를 펼쳤다. 이후 광주 서구 쌍촌동 선거캠프에서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홍보 활동을 이어가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김대중 후보는 전남 진도와 장흥의 5일장을 찾아 거리 유세를 진행했다. 장흥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부친인 한승원 작가를 만나 지역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후 광주로 이동한 김 후보는 운천저수지 사거리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열고 인공지능(AI)·미래산업 분야 10만 인재 양성, 전남광주교육과정개발평가원 설립을 통한 대입 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정선 후보는 광주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 인근에서 출근길 인사를 시작한 뒤 유세 차량을 이용해 조선대학교 정문과 봉선시장,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일대를 돌며 유권자들을 만났다.

이 후보는 "교육이 지역과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며 "강남이 부럽지 않은 공교육,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교육, AI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관호 후보는 전남 순천 아랫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악수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의 도박·사법 리스크 등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 비용을 전액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제안했다.

장 후보는 "재선거가 현실화하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교육 현장에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과 학생들이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

야권 "공공자산 매각해 건설" vs 민주 "선거용 생색내기"

민주-야권, 동구~화순 철도 공약 놓고 연일 공방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앞둔 가운데 광주 동구청장, 전남 화순군수 선거 출마자들이 동구~화순 철도 건설을 두고 여야로 나뉘어 연일 공방을 펼치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 후보와 무소속 김회수 화순군수 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발표한 광주 동구·화순 철도 연결 공동 구상과 관련해 민주당 후보들이 선거용 생색내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 주장한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특례법에는 전남과 광주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에 대한 일반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가 있을 뿐, 화순과 광주를 잇는 도시철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며 "하지만 마치 광주·화순 도시철도가 특례법에 이미 반영돼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상대 후보 공약을 폄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공약은 단순히 '철도를 놓자'는 구상이 아닌 광주도시철도 1호선 용산동 차량기지 부지를 매각해 그 대금을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고, 차량기지를 화순으로 이전하며, 화순과 인접한 내남동·선교동까지 지하철 시대를 여는 구체적 설계"라며 "재포장이 아닌 진일보한 공약이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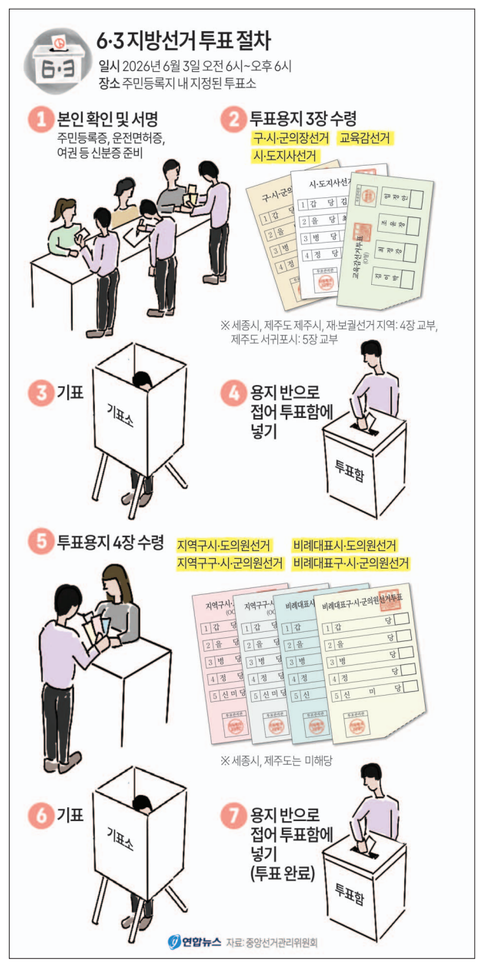
두 후보의 주장은 전날 광주시와 교통공사 자산인 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매각 자금을 활용해 동구~화순 간 철도를 건설하고 차량기지는 화순으로 이전하자는 공약에 대해 민주당 임택 동구청장 후보와 임지락 화순군수 후보가 논평을 통해 공개 반박한 데 대해 재반박한 것이다.

임택·임지락 후보는 앞서 논평을 통해 "해당 공약은 이미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 특례에 반영돼 있는 사항으로, 새로운 정책이나 공약이 아니다"며 "선거용 생색내기, 기존 사업 재포장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전남선관위, 본투표 준비 마무리

투표관리 1만5000명·개표관리 9300명 배치
투표함 경찰 호송·개표 전 과정 참관인 입회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일 대규모 관리 인력을 투입해 안정적인 선거 관리에 나선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감시를 명분으로 한 투·개표소 무단 침입이나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인 3일 광주에서는 359개 투표소와 5개 개표소가 운영된다. 투표관리 인력 5000여명과 개표관리 인력 3300여명이 투입돼 투표부터 개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전남은 785개 투표소와 22개 개표소가 설치된다. 투표관리 인력 1만여명과 개표관리 인력 6000여명이 배치돼 역대 최대 규모 선거인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 선거를 포함한 각종 선거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혼선을 막기 위해 투표소 위치 확인을 당부했다.

선거인은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선거인명부 열람서비스, 중앙선관위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정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 편의성도 높였다.

광주는 모든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마련했다. 전남 역시 전체 투표소 785곳 가운데 782곳을 1층 또는 승강기 이용이 가능한 장소로 지정했다. 접근이 어려운 일부 장소에는 임시경사로를 설치해 이동 약자의 투표권 행사를 지원한다.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확대 운영한다.

모든 투표소에는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대형 기표대가 설치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와 특수형 기표용구가 비치된다. 선관위는 신체적 불편으로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도 차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개표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도 강화된다.

선거가 끝난 뒤 투표함은 투표관리관과 참관인 입회 아래 봉인된다. 이후 경찰 호송을 받아 개표소로 이송되며, 선관위가 보관 중인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도 정당 추천 선관위원과 참관인이 함께 개표소로 이동하는 절차를 거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읍·면·동 단위까지 실시간 공개된다.

공정선거참관단도 투·개표 전 과정을 점검한다.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이 투표와 개표, 투표함 이송 과정 등을 참관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이 투표의 자유와 비밀을 온전히 보장받는 환경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부정선거 감시를 명분으로 투·개표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무단 침입,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등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